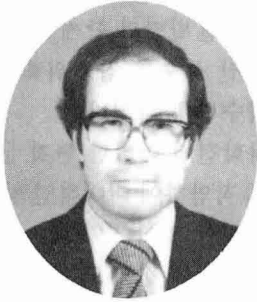


2000년대

한국 방위산업 방향과
정책대안 연구



金萬圭 인하대 교수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가 각 계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어, 이에 발췌 소개합니다 (참조 : 93/5월호 p. 11 보도기사)

인하대의 金萬圭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美 켄터키大的 文正仁 교수, 인하대의 白光一, 金義坤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보고서는 大學에서 나온 방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자료입니다

시대별 防産의 변천과 80년대 이후 防産의 침체배경, 2000년대 한국 방위산업의 정책 대안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여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탈냉전에 따른 국제관계의 재편성 및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군수 수요의 점진적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민족주의와 무기체계의 연계,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비한 방위산업의 향후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재점검해야할 전환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방위산업의 추진과정을 재조명해 보고 현재의 위치와 실상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위산업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위산업의 역사적 전개 및 평가

한국의 방위산업은 크게 도약기와 침체기로 분류됩니다. 도약기는 1971년 방위산업 초창기로부터 1979년 유신말기까지로 미국측에 전량 의존하던 무기체계 획득을 기술도입생산과 국내 독자연구개발을 통한 획득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탄약과 기본 병기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기본원칙으로 했던 정책방향의 제시는 무기체계 소요 및 획득기획에 일관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이시기에 막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었고,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 품목의 대량생산을 위한 포괄적 방위산업 정책이 병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정부의 노력도 대단했는데 병역면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인력난속에서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었으며 연구개발 투자비도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71년의 경우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는 0.2%로 3억 4천 1백만원에 그쳤으나 1976년에는 5.1%로 그 액수도 36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산 착수 10년 만에 모든 기본 병기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가능케 했는데, 한국

방산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정책의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을 기점으로 방위산업이 여타 민수산업과 다름없는 위상으로 전락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소요 및 획득기획 단계에서 국내 연구개발 생산이 지양되고 기술도입생산과 해외구매를 통한 효율적 무기 획득 방법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무기체계 획득에서 국내연구개발 생산방식의 회피는 연구개발 단계에 즉각적인 과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국내 연구개발의 산실이라 할수 있는 ADD의 규모가 급격히 하향 축소 되었습니다.

1981년 대통령의 지시하에 ADD 총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여명의 연구인원이 대폭 감원되었고, 기구 및 예산도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탐색개발에서 실용개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요능력 요구(ROC)에서도 각 군은 과도한 요청으로 방산

업체들의 실용개발 및 양산체제에 심각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외구매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주었으며, 수요측면에서 방산업체의 불안감을 심화시켰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도 미미하여 방산관련 연구개발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전체국방비의 5%가 방산관련 연구개발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는 이 비율이 1.3%~1.5% 수준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군사관련 연구개발비의 재원이었던 방위세 징수도 1989년 폐지되었고, 방위성금 모금도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을 방산부문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부족했고, 국방부, 상공부, 과학기술처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도 갖추어 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본 병기의 국내 수요가 충족된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방위산업 전문분야에 걸쳐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이의 극복을 위해 방산물자의 해외수출을 모색했으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제3국 무기수출규제의 강화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한국방위산업정책의 비교평가

구 분	도 약 기	침 체 기	
시 기	1971~1979	1980~현재	
무기체계 획득방식	국내 연구개발 선호	해외구매 / 기술도입생산 선호	
연구·개발	ADD중심 / 구심점 있는 연구개발	분산화 / ADD, 업체, 사용군, 관료간의 갈등 대립 표면화	
방 위 산 업 정 책	공급유인정책	포괄적 공급유인	세계상의 혜택 이외 공급측면 유인효과 폐기
	수요보장정책	수요의 안정성/이윤의 보장/ 확실성/독과점 허용	불예측성/경직성/이윤확보의 불투명/ 제한경쟁체제 실시
	연관산업정책	重화학 등 공업정책과의 체계적 연계	정책연계 노력 미흡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의 증가/ADD기능강화/ 산·학·관 연계체제의 정비	연구개발의 감소/ADD무기력화/ 산·학·관 연계체제 점진적 정비
국 제 환 경	방산추진에 유리	방산육성에 불리(제3국 무기 수출규제/군사기술이전 규제)	
정책운동체계	강력한 지도자의 정책의지/ 높은 정책 우선순위/청와대 중심의 조정 /효과적인 협력체계	정책의지의 퇴색/낮은 정책 순위 단편화된 조정/정책결정의 관료 정치화	
기 업 전 략	왕성한 의욕/확장적, 능동적	의욕상실/민수전환/현상유지	

이러한 방위산업 정책의 비전(Vision) 결여, 정부의 조정지원능력 감퇴, 그리고 미국의 압력과 수출가능성의 봉쇄등은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80년대의 방산침체는 지극히 자명한 결과라 하겠으며, 특히 정책운용체계의 퇴행은 80년대 방위산업침체에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살펴볼때 한국방산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의 안보, 경제, 정치 그리고 과학기술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맥락에서 조망할때 현상황이 지속되는한 한국 방위산업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안보환경 변화와 방위산업의 과제

2000년대 한국방위산업의 위상설정에는 탈냉전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즉 이데올로기의 종언, 경제적 민족주의 또는 신중상주의의 심화와 함께 한국 안보의 중요요소인 미국의 세계정치에서의 비교우위 내지는 절대우위성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東北亞의 안보환경, 특히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변화, 러시아의 東北亞 적극정책의 추진 가능성, 중국의 南北韓정책의 전략적 활용,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군사대국화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군비증강으로 인한 위협구조의 상존 등등에 따른 한국 안보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내지 철수를 예상하여 주한 미군에 의존하였던 첨단무기, 전술핵, 통신정보(CI)의 철수에 대처할 무기체계의 선택, 획득을 위한 방산정책의 확고한 방향설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진로를 좌우할 무기체계의 선택은 안보환경 및 전략전술 등 대내적인 요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쟁 혹은 무기전시회를 통한 신형무기에 대한 지식습득과 구매욕망을 자극하는 국제 전시효과 등 외부적 요인들도 무기체계 선택에 중요합니다.

2000년대 방위산업 추진은 첨단 고도정밀무기의 획득에 강한 영향을 줄 장차전의 양상을 전제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00년대 한국 防産의 진로는 정치적 문민화, 군사위협인식의 이완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방비의 상대적 감소와 경제적 복지비용의 상승 등 정치 경제적 변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전제하에 계획되고 위상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무기체계와 방위산업

무기체계의 결정변수와 획득방법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 무기체계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對북한 군사억지라는 전략목표에 비추어,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양적 열세를 질적 개선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상하는 경우,기존의 무기체계 및 무기획득의 방산전략은 적절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70년대 후반 이후 무기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현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아직도 재래식 병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의 탈피를 위해 주변국가 특히 중국 및 일본의 무기체계 개발에 비추어, 첨단 고도정밀 무기의 획득을 위한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요청됩니다.

오늘의 한국군이 무기체계 획득면에서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첨단 고도정밀무기의 경우 대외의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획득정책 및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기체계 공급선의 다변화는 바람직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를 극복할 해결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표준화, 호환성 및 합리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한국 무기체계는 획득비용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미흡했지만, 군부집권과 군사문화의 지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탈냉전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의 정치적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한국 무기체계의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對북한 위협억지**라는 단일위협구조로부터 지역적 불안정에서 파생되는 다원적 위협구조로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첨단 고도정밀 무기체계의 확보가 요청됩니다.

아울러 지상군중심체제에서 벗어나 해/공군중심체제로의 정책적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한 미군의 철수를 전제하고 그 공백을 메울수 있는 방향에서 무기체계 선택방안이 추구되어야 하고, 특히 공군력의 증강과 지휘 통제 통신 정보분야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 **고도 정밀 첨단화의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함과 동시에 기동력 화력 기계화 정확도의 요청과 고도정밀의 유도무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무기체계 획득방식에서 기술민족주의로 초래되는 첨단핵심기술 이전의 거부와 규제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구매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독자 연구개발생산으로의 적극적인 방산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탈냉전과 민주화로 인한 방위비의 상대적 감소 예상과 고도 정밀 첨단화를 추구하는 기술 및 자본집약적 무기체계의 추세에 따른 무기 획득비용의 증가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획득방식이 어쨌든 경제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 또한 방위산업 구조개편 측면에서 기본 병기 및 탄약의 첨단화와 고도정밀화를 위해

對북한 위협억지라는 단일위협구조로부터 지역적 불안정에서 파생되는 다원적 위협구조로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첨단 고도정밀 무기체계의 확보가 요청됩니다.**

아울러 **지상군중심체제에서 벗어나 海/空軍중심체제로의 정책적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구조개편 측면에서 **기본 병기 및 탄약의 첨단화와 고도정밀화를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한 독자적 연구개발획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한 독자적 연구개발획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00년대의 무기체계 확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민需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줄수 있는 항공무기, 함정무기, 통신 및 광학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획득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방산정책능력 평가 및 대안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할 역할은 방산과 관련된 세제, 금융, 임금, 원자재 등 공공부문의 정책개발과 長期안정적 수요구조와 함께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 중화학공업등의 관련산업 정책개발, 연구개발투자, 高학력 기술인력 확보, 産·學·官·軍간의 연계체제등 과학기술정책개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2000년대 한국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해소되어야할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탈냉전과 민주화에 따라 어떻게 하면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방위산업 육성을 정당화하느냐는 문제

* 방산물자의 구매자가 정부이므로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요 및 획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요창출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하느냐는 문제

* 군사과학기술수준의 제고를 통한 첨단고도정밀무기의 국내 연구개발

* 국제 기술환경(기술보호주의/지적 소유권)과 국제안보환경(세계 군수시장 구조/동맹관계)에 대처하면서 방산육성을 위한 외교능력의 제고

* 對정부 의존현상을 탈피하여 自生能力을 신장할수 있는 방산업체의 기업전략 확보

* 방산관련 기구 및 조직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제거하고 국가수호 목표에 협력 결속시키기 위한 확고한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비전의 확립

이상의 정책과제에 비추어 2000년대를 대비한 한국防産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탈냉전, 남북한 군축협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적정선유지의 필요성과, 2000년대 한반도 안보환경 및 위협구조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정 최고지도자의 방산부문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방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기능 조정을 비롯한 방산관련 제도부문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 방위산업 운영정책을 쇠퇴함으로써, 해외 구매 보다는 국내 연구개발생산과 기술도입생산에 정책적 역점을 뒀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 제3국 무기수출 규제 및 기술민족주의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한미기술동맹의 추진, 러시아 동구권 서구국가들과의 방산기술협력의 다변화 등 방위산업 육성 관련 외교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방산관련 연구개발비 투자의 과감한 확대(현재의 국방비 대비 2%선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8~9%선으로 증액)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방산업체의 경영쇄신을 통한 자생 자구적 노력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맺는 말

2000년대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안보환경 및 위협구조의 변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능성과 무기체계의 변질 등 우리의 국가수호를 좌우할 변수들의 커다란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방위산업은 기로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 모색과 위상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적 추진을 좌우할 무기체계의 선택, 획득 및 생산에서, 해외구매 보다는 독자적인 국내 연구개발 생산에 역점을 두면서, 예상되는 위협구조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2000년대를 대비한 방위산업의 구조개편은 무기체계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분업화에 따라 단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추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 확고한 방산정책 의지 및 구조적 혁신 등이 요청됩니다.

2000년대의 안보 및 위협구조에 대비한 무기체계의 소요 및 획득, 연구개발, 대량생산 등과 연관된 방위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향후 진로는 안보의 중요성 및 위협구조의 尙存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선택 및 획득방식에서 해외구매의 주장과 민주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호를 다른나라에 위탁할수 없다는 국민과 국정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2000년대에도 지속적인 자주 국방이 긴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때 한국방위산업의 재도약과 밝은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거시적 환경요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기체계의 국내연구개발생산을 위한 방산구조 자체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때, 2000년대를 향한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위산업의 지속적 육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추진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주국방에 대한 역사적 필연성에 비추어, 장차전 양상의 예상에 따라 병사의 수 등 비무기체계적 소요 경비는 대폭 줄이더라도 첨단 고도정밀 무기체계의 개발에는 방산예산의 지속적 확보내지 증액이 요청됩니다.

셋째, 국가수호를 위한 무기체계 개편방향으로, 2000년대의 안보환경 및 위협구조의 변동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첨단 고도정밀무기의 개발과 아울러 地上軍중심체제로부터 海·空軍중심체제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에서 국내 연구개발 생산으로의 적극적인 방산정책 추진과 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고, 무기체계와 관련된 핵심, 주변, 지원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고도 정밀유도무기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넷째,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한 독자 연구개발 획득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특수한 첨단무기체계는 동맹체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해외구매 획득정책이 요구됩니다.

2000년대를 대비한 한국防産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정 최고지도자의 방산부문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방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産·學·研·官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기능조정을 비롯한 방산관련 제도부문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위산업 운영정책을 쇄신함으로써, 해외구매 보다는 국내 연구개발생산과 기술도입생산에 정책적 역점을 둬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정책수립 및 기능조정을 비롯해 방산관련 제도부문의 전반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의 방위산업은 이를 특성화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방산관련 연구개발비의 과감한 투자 확대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여덟째, 무기체계의 개발생산은 민간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소요 활용은 민·군 공용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방산체제의 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

한편 韓美간의 지속적 방산 협력을 위한 대안으로는 미국의 군사장비 구매와 기술이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절충교역 정책을 수행하면서 淸美 방산협력과 군사과학기술 획득창구를 정부/민간으로의 이원화 및 민간부문 창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의 방산관련 제도, 법률, 정치동태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접근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방산의 다변화, 다원화, 국산화 정책대안의 개발을 모색해야 합니다. *